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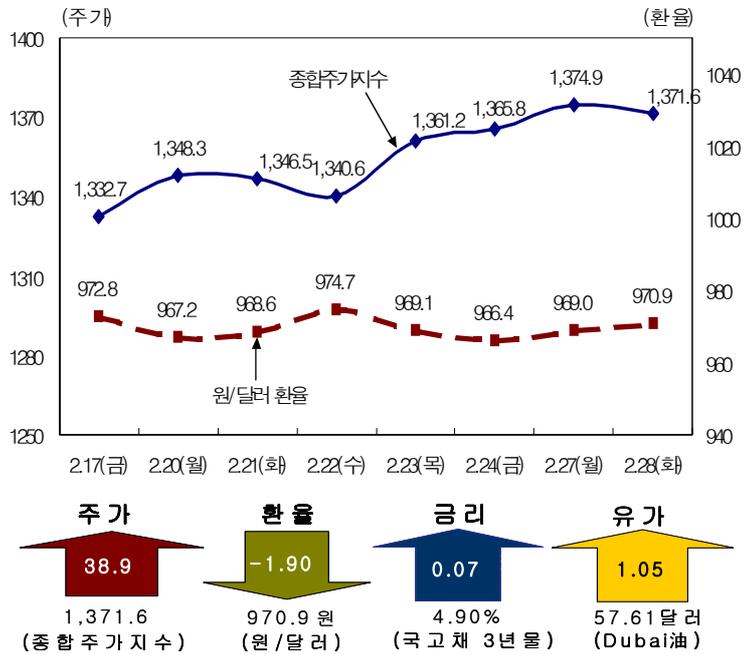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와 대응 전략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7~2.2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와 대응 전략 1

주간 경제 동향 8

- 실물 부문 : 내수 회복세 둔화 우려감 제기 8
- 금융 부문 : 엔화의 대폭 강세로 원엔 환율 상승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 본 부 장 (3669-4032, bkyoo@hri.co.kr)
 □ 동북아 분석팀 : 홍 순 직 수석 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와 대응 전략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제1의 투자국으로서, 2002년 7.1 조치 이후에는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중간 교역 비중은 2000년 23.5%에서 2002년에는 25.4%, 2004년에는 39.0%로 늘어났으며, 투자도 점차 대형화·다양화·증장기화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기업 수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 중 40%를, 북한 내 투자액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경협이 확대된 배경은, 지정학적으로는 유사한 정치 체제를 비롯하여, 북미 및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의도, 북한 경제 지원을 통한 중국의 안정적 한반도 관리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 목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조달 시장 확보 및 소비 시장 개척 목적과 외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이 부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對中 의존도가 당분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유지,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외부 자원 유입의 필요성 증대로 대북 투자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 내에 북한의 對中 경쟁력 격차가 해소될 것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의 병행 발전 전략 추진으로 남북경협이 북중 경협 규모를 상쇄할 만큼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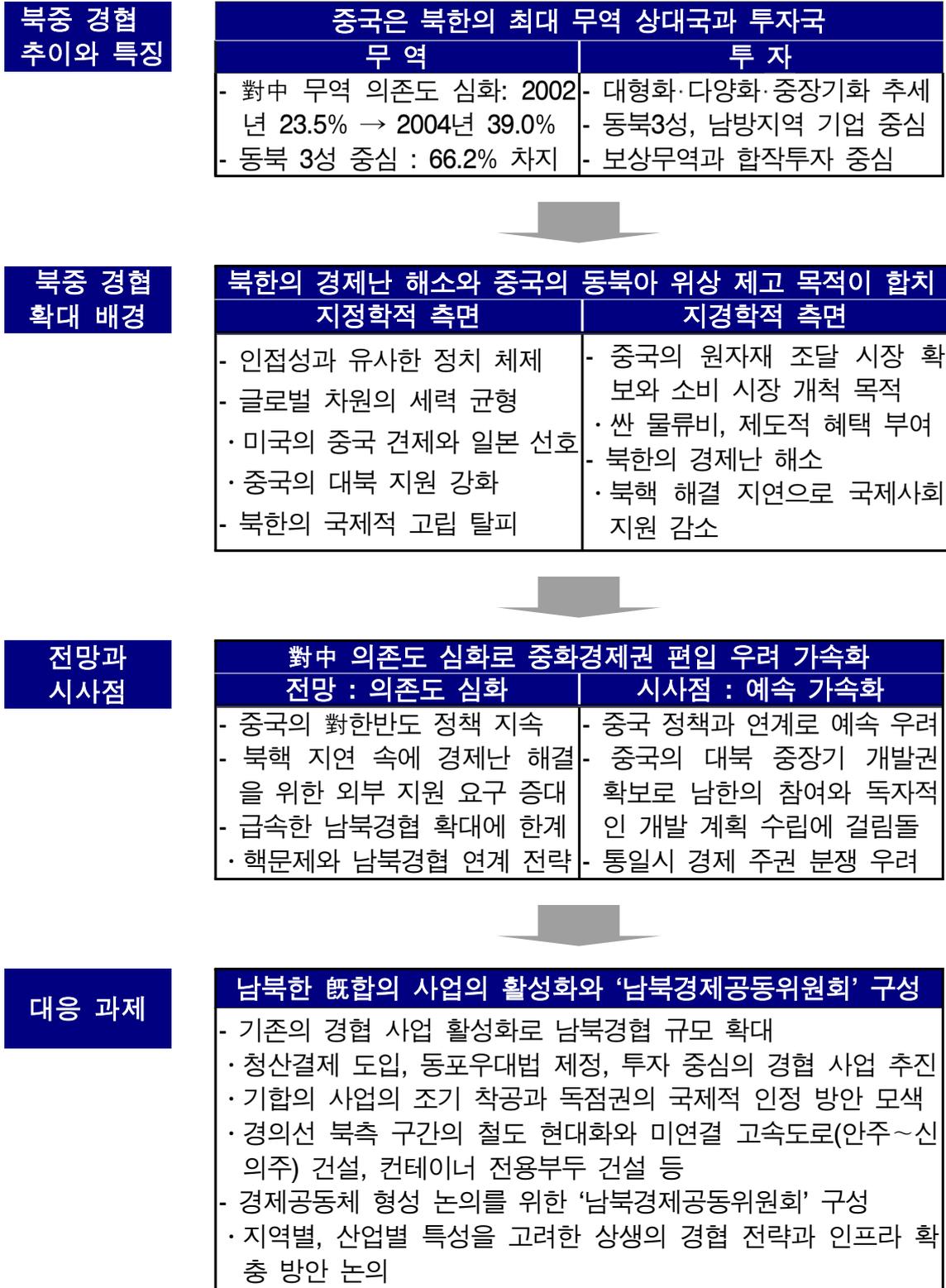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개방 촉진, 통일 비용 절감이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 전략하여 북한 경제가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북중 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정치·문화적으로도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증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및 북일 수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협 규모 확대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 협력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3통 보장과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 남북청산결제 방식 도입과 동포우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합의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써 중국의 선점을 경계해야 한다. 경의선 북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와 미연결 고속도로(안주~신의주) 건설 사업, 남포항과 해주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은 좋은 대안의 하나로 지적된다. 기합의된 장기 독점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요구된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통일 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인 경협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경협 사업과 균형 발전 모델을 북측과 공동 모색해야 한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이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의 시발점으로 활용되기 바란다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

-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와 대응 전략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와 대응 전략

1. 최근 북중 경제 협력 추이와 특징

○ (개관)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투자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무역 : 북한의 對中 무역 의존도는 2000년 23.5%에서 2004년에는 39.0%로 늘어났으며, 2005년 1~9월중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33%에 달함

· 북중간 상품 구조 : 對中 주요 수출품은 의류·편직물(11.9%)를 제외하고는 광물성 연료와 철강, 아연, 어패류,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에 80% 이상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품은 곡물과 식용 육류, 가전기기 등의 생필품과 산업용 기계류와 화학제품 등에 편중되어 있음

· 북한의 전반적인 무역 증가 속에 북중간 교역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대중 무역 적자도 고착화되고 있음 (대중 무역 적자 : 2002년 1.97억 달러 → 2005년 1~9월 4.29억 달러)

· 특히, 대중 원유 수입은 2000~2004년간 전체 수입의 92.5%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2004년 15.1%에서 2005년 1~9월에는 105.6%나 급증함

· 동북 3성 중심의 북중 무역 : 2005년 1~9월 중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3성이 북중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중 수출액의 71.1%를, 수입액의 63.9%를 차지함으로써 북중 전체 무역의 66.2%를 차지함 (신의주~단동간 경로가 북중 무역의 약 80% 담당)

<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 비중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

구분	2000		2002		2003		2004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 국	488	23.5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한 국	425	20.5	641.0	22.1	724.0	23.2	697.0	19.6
일 본	463.7	22.3	369.5	12.7	265.3	8.5	252.6	7.1
태 국	207.8	10.0	216.6	7.5	254.3	8.2	329.9	9.3
러시아	46.3	2.2	80.7	2.8	118.4	3.8	213.4	6.0
총 계	2,077.6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호.

- 무역 형태별로는 2004년 대중 수출은 보세무역과 변경무역이 전체의 81.5%를, 수입에서는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반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일반교역 비중 : 2002년 41.9% → 2003년 44.2% → 2004년 46.3%)
 - 특히 대중 수입 부문에서 일반교역은 전체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중앙당국의 수입 계획에 따른 對중국 물자 조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투자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부터 자원 개발 중심에서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며, 보상무역 형식이 많음
-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기업 수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 중 40%를, 북한 내 투자액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비즈니스 관행 강화, 투자 설명회 확대 등으로 급증하였음 (2002~2004년의 최근 3년간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전체 중국 투자액의 75.8%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130배나 폭증)
 - 중국은 2004년 2월, '북경조화우련(北京朝華友聯)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차원의 대북 진출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관광총국의 위임을 받아 민·관·영을 통틀어 유일하게 자문 권한을 인정받은 기관임

< 북경조화우련 문화교류공사의 북한 투자 대상 산업 목록 >

-
- 채광 산업 : 송천탄광(납, 아연, 구리, 니켈) 등
 - 석탄광 : 기존 석탄 광산 개조
 - 전력 산업 : 수력, 화력 발전소 및 전력 수송 네트워크
 - 신설 투자 부문 : 수력발전소, 500kV 이상 고전압 수송 전선, 중소형발전소
 - 화학공업 산업 : 남흥 청년화공연합체(비료공장)
 - 경공업 : 섬유·직조·양말·피혁·의복 공장, 담배공장, 자전거 공장 등
 - 농업 분야 : 육류·우유 가공공장, 식품 가공공장, 벼, 옥수수, 과일 등
 - 수산 분야 : 어류·해조류 가공공장, 조선업
 - 금속기계 가공 : 김책강철연합체, 강선강철연합체, 태안중형기계공장 등
 - 호텔 투자 : 류경호텔
 - 부동산, 도시 개발
-

자료 : 북경조화우련 문화교류공사 홈페이지

- 투자 부문은 50년간 70억 위안화의 무산광산 개발 및 관련 수송 시설 건설을 비롯하여, 량강도의 혜산 동광 개발(2.2억 위안화), 평안북도의 용등 탄광 개발 등 지하자원 개발 부문이 가장 활발함
- 이외에도, 원산 앞바다의 중국 어선 5년간 개방하는 대신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기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프라와 제조업, 유통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권 대신에 북한 내 도로와 관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평양 제1백화점에 5,000만 위안화 투자하고 10년간 임차권을 확보하였음
- 투자는 동북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권 확보보다는 원자재 조달과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둔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보상무역이 투자 설비만큼 생산 제품을 보상받으므로 투자 리스크도 적고 상환 주기도 짧아 상호 결제 청산이 용이하기 때문임

2. 북중 경협 확대 배경과 전망

- (배경)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북한의 요구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제고 목적이 부합되기 때문임
- 지정학적 : 유사한 정치 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제고 등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와 미·일 견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세계를 겨냥한 전방위 외교 추진의 거점 확보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정과 평화적인 분단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일·러의 대북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
- 북한 역시, 북핵 및 납치자 문제로 인한 북미 및 북일 관계 악화로 국제적 고립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체제가 유사한 중국과 혈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체제 안정을 위해 유리함

- 지경학적 : 중국의 원자재 조달 시장 확보 및 소비 시장 개척 목적과 외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이 합치되기 때문임
 -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로 원자재 공급 부족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품질이 우수한 북한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미래의 소비 시장 선점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였음
 - 북한 역시,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북핵 해결 지연으로 인한 국제 지원 감소 속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지원(원조)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이었음
 -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제도적 혜택(변경무역에 대해 중국은 관세와 부가세 50%씩 감면) 등의 우호적 무역 조건과 함께, 중국산 제품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 등도 북중 무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전망) 북중 경협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쟁력 격차, 남북경협 등에 좌우될 것이나, 점차 확대되어 對중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중 경제 관계는 정치·안보적 이해 관계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어, 중국의 對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투자 및 경제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선린 우호, 협력 강화'의 16字 방침에 따라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북 투자와 교역도 늘어날 전망이다
 - 지난해 10월의 후진타오의 방북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수용할 경우에는 약 20억 달러의 대북 지원(원조)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하 자원과 유통, 건설 분야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10) 중 경의선 북측 구간의 복선화 및 현대화 사업 부문의 1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하여, 압록강변을 따라 단동~동북 3성의 연결하는 동벤다오(東邊道) 철도 연결과 서해안 유전 공동 개발 사업 등 총 30억 달러의 대북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합의되었다는 說도 있음(시사저널, 2006. 1. 31~2. 7)

- 중국은 최근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 및 홍콩을 비롯한 해외 화교기업들의 대북 투자 진출을 유도하고 있음
 - 투자 형태도 인프라 구축형 투자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및 시장 개척형 투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대북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북중 교역도 늘어나 대북 경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또한 중국의 동북3성 개발로 철재, 시멘트, 화학제품 등 다양한 생산용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 정부 차원의 변경무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내부 자원 부족의 북한으로서는 외부 자원 유입이 절대 필요할 것이므로 중국과의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핵 해결의 지연과 체제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서방국으로부터의 외부 자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과 한국과의 경협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북한은 중국에 비해 무역경쟁력이 열세에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이므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당분간 대중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1998~2004년간 북중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0.5 이상의 북한의 對 중국 수출특화 품목은 HS 기준 96개 품목 중 어패류와 금속광물, 목재 등 5개에 불과하며, -0.5 이하의 수입특화 품목은 71개로 수출특화품목의 14배에 달함¹⁾
 - 또한 북한의 산업 구조는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구조인데다, 수입 원자재의 대부분이 내수 가동을 위한 생산재로 사용되는 내수 경제 구조이므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의 병행 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이 없는 한, 늘어나는 북중 경협을 상쇄할 만큼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의 확대는 물론,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1) 조명철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3. 시사점과 대응 전략

○ (시사점) 개혁·개방 촉진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북한의 '南南北中'의 경제 개발 전략의 가시화로 북한 개발에 대한 남한의 주도권 상실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 종합 개발 계획 추진의 걸림돌로의 작용 우려가 있음

- 긍정적 측면 :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 개혁·개방 촉진 등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 사회 편입 및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임

- 북중 경협 확대는 공장 가동률과 성장 잠재력 제고, 설비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경제 회생의 수혈처 역할을 담당 (북중 무역이 1% 증가시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 경제 성장률은 0.11%, 국민소득은 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됨²⁾)

- 경협 확대 과정에서 시장경제 학습과 경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혁·개방이 촉진되며, 기술 이전과 인적 자본 확충의 효과를 얻게 됨

- 또한,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회생은 북한의 구매력 증대와 남북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통해 남북경협 확대 및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함

- 부정적 측면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물론, 본격적인 개방 및 통일 이후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사업 추진에 장애

- 북한 지역이 '南南北中'의 분할 구도로 개발됨과 함께,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여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³⁾

- 중국 중심의 산업경제 정책 추진으로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경협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 역할이 약화되고 북한 경제의 고도화와 선진화 속도가 지연될 수 있음

- 또한, 북중 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문화적으로도 예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중국의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및 북일 수

2) 박순찬,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0.

3) 홍순직, “북한의 '南南北中' 개발 전략 가시화,”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6. 2. 6.

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종합개발계획 수행에도 걸림돌로 작용
 ·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존재함

○ (대응 과제) 남북한간 既합의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 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존 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규모 확대와 함께, 既합의된 대규모 경협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 · 조기 착공함으로써 중국의 선점을 경계함
 - 자유로운 3통(통관·통행·통신)과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 남북 자유무역,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
 - 특히, 청산결제 방식 도입과 동포우대법 제정을 통해 남북경협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북측과 既합의된 남측 기업의 장기 독점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기합의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도 병행 추진)
 - 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부문과 철도·도로·항만 등의 물류 유통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시급하므로 조기 추진이 요구됨
 -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 댐 건설과 경의선(서울~개성~평양~신의주) 북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 및 미연결 고속도로(안주~신의주 구간)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철, 마그네사이트 등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경협 차원의 논의가 아닌, 통일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인 경협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 '분과별 小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특구의 확대 발전 방안은 물론,
 -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북한의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win-win)의 경협 사업과 균형 발전 모델을 공동 모색함
 - 6월로 예정된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을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수 회복세 둔화 우려감 제기

○ 1월 산업생산은 외형상 전년동월대비 6.4%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내수 출하 증가율이 수출 부문의 8.6%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1.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내수 부문이 취약한 상황임

향후 소비 회복세 약화, 설비투자 부진 예상 - 또한 소비 회복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내구재 소비가 작년 12월에 11.1% 증가에서 1월에 6.3%로 4.8%p 급락함에 따라 향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우려가 증대됨

- 특히 설비투자추계의 경우 12월의 12.6% 증가율에서 1월에 0.2% 증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도 2.0% 증가에 불과하여 투자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증대됨

민간 심리 안정에 실패할 경우 더블딥도 가능 -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여 정책 실패나 정치 불안 등으로 '경기 再침체'에 빠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민간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절실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4.6	4.0	2.7(0.4)	3.3(1.2)	4.5(1.9)	5.2(1.7)	-	-
		소비재판매	-0.8	3.9	1.2	3.4	4.4	6.8	9.6	9.4
		설비투자추계	1.4	3.2	3.9	1.4	1.1	7.0	12.6	0.2
		건설수주	-3.9	9.5	22.3	38.5	15.8	-17.9	-17.0	10.9
	공급	수출	31.0	12.2	12.7	9.0	15.4	11.8	11.2	4.3
		산업생산	10.2	6.3	3.5	3.5	7.1	10.3	11.3	6.4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70	2,247
		실업률(%)	3.7	3.7	4.2	3.7	3.6	3.5	3.5	3.7
대외 거래	수입	25.5	16.3	14.7	15.1	20.8	14.9	15.6	17.6	
	경상수지(억\$)	282	166	59	26	27	54	5	1	
물가	무역수지(억\$)	294	235	63	61	50	66	16	6	
	소비자물가	3.6	3.2	3.2	3.0	2.3	2.5	2.6	2.8	
	생활물가	4.9	4.1	4.7	4.5	3.4	3.4	3.7	3.8	

주 : 경제성장률()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가율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

□ 금융 동향 : 엔화의 대폭 강세로 원/엔 환율 반등

○ (해외 금융시장)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으로 엔화 대폭 강세

후쿠이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엔화가 달러화 등에 대해 대폭 강세

- 금리: 1월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예상치 상회(전월 0.3% →1.1%, 예상 0.6%)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 (4.54%→4.59%)
- 환율: 미 경기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후쿠이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으로 엔화가 달러에 대해 대폭 강세 (\$/€ : 1.1940→1.1923, ¥/\$: 118.06→116.10)

○ (국내 금융시장) 엔화 강세와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등으로 환율 약보합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 등으로 원화 환율 약보합세

- 주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증권주 강세와 주가지수 선물 강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등으로 대폭 상승 (전주 말 1,332.7→1,371.6)
- 금리: 채권형 펀드 수탁고 증가 등 채권 매수 심리 호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금리 상승과 1월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83%→4.90%)
- 환율: 1월 경상수지 흑자의 급감 등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과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등으로 약보합세 (전주 말 972.8→970.9)

○ (전망) 해외 정책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며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세 지속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2.17	3.1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32.7	1,371.6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83	4.90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72.8	970.9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115	11,054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5,714	15,964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54	4.59
	일본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52	1.61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1940	1.1923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8.06	116.10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5.56	57.61